

한국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에 美 행정부·의회 반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
구글·애플·메타 등 직격탄 우려
“미국 기업 차별” 보복관계 검토
“외교·경제적으로 큰 실수” 비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만 규제” 반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도입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산업계 전반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이 사실상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며, 이를 신뢰 위반, 경제적 배

신으로 간주하고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PCPA는 국내 중개거래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산 금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파산 시 입점업체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해야 한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서 교부 의무, 수수료와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랫폼 규제 입법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김 의원

은 이재명 정부에서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의회, 산업계, 그리고 백악관까지 모두 ‘PCPA 저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PCAC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대표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PCPA는 산업 정의와 규제 기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미국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러한 디지털 규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보복 조치를 공식 예고했다. 지난 3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PCPA가 미국 기업만을 차별하고 한국과 중국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한미 안보 동맹의 큰 장애물”

한국의 규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로 보지 않는 미국 고위 인사들도 적지 않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PCPA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사용자 데이터와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는 선물”이라며, 이 법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툼 코튼 상원의원은 아예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해 국방부에 PCPA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미 의회는 한국이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미국 기술 기업만 겨냥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기술 산업계도 대거 반발하고 있다. CTA, CCIA, ACT, SIIA 등 6개 대표 산업 단체는 지난 1월 USTR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고의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글,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이 주요 회원사다.

CTA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리켜 “미-한 무역 및 안보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PCPA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AMCHAM은 “한국 정부의 PCPA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며,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50% 관세도 검토 중”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응해 미 하원의 캐슬 밀러 의원이 발의한 ‘미-한 디지털 무역 집행법’은 지난달 초당적 지지를

받아 재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USTR이 자동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칼을 빼들었다. 그는 4월 백악관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밝히며, 앞서 2월 서명한 ‘상호보복관계 대통령 각서’를 통해 디지털 규제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발동해 한국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동맹국을 상대로 한 가장 강경한 디지털 통상 대응이 될 수 있다.

CSIS, ITIF 등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의 PCPA가 EU의 실패한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해 미국과의 충돌을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기업을 제외하는 방식은 ‘정치적 목적의 비대칭 규제’이며, 결국 한국 스스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 기업을 고의로 차별하는 외국 규제는 국가 안보, 무역 정책, 외교 전략 모두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동맹국 간의 신뢰 테스트로 읽힌다.

최근 파리 AI 액션 서밋에 참석한 벤스 부통령은 “일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고려 중인데, 이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실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준명 기자



‘비상 지역경제 상황실’ 가동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비상 지역경제 상황실’에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금호타이어, 피해 복구·새공장 건립 대책 논의

강 시장·박군택 의원, 경영진 면담
사측, 7월 중 ‘복구 로드맵’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박군택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등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 고용 불안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복구·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재 피해 설비 복구 일정 △공장 재가동을 위한 조건 △휴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방안 △공장

이전 계획과 부지 용도변경 등 주요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구·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금호타이어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로드맵에 새공장 건립 계획을 분명히 밝힐 경우 광주시, 국회,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이전지원단’(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18일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금호타이어 대주주 측과 ‘화재피

해 복구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뒤, 7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광주시는 고용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복구 및 공장 이전 준비 등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김해김씨 우석문중 임시총회 소집공고

김해김씨 우석문중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종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문중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안건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나주시 봉황면 장성리 소재 김해김씨 우석문중 영모재
-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 ◆ 안건 : ① 문중대표자 선임에 대한 건 ② 문중재산 정리 및 문중재산 회복을 위한 재판에 대한 건 ③ 추가 문중재산 회복을 위한 재판 준비건 ④ 2022년 11월 11일 및 2024년 11월 18일(음력 10월 18일) 개최된 정기총회 추진의 건
- ◆ 기타사항 : 안전 관련 자료는 문중 사무실에서 열람가능

2025년 6월 18일

김해김씨 우석문중 연고향존자 김 병 조

가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웨(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양시 공고 제2025-1561호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추가 공고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와 초안 추가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8.

광 양 시 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약 66,000㎡ 이상
 - 시설용량 : 소각시설 22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30톤/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90톤/일 (음식물 70톤/일, 가축분뇨 20톤/일)

※ 시설규모는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 : 광양시
-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14:00
 - 개최장소 : 광양시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동길 6, 3층)
- 3. 공청회 의견진술차 추천 및 신청**
 - 제출기간 : 2025년 7월 17일(목) 까지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 발표내용 :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 진술차 추천서 제출
 - 제 출 처 : 광양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4층)

- 방문제출 : 제출처 방문 제출(평일 09:00 ~18:00)
 - 전자우편 : dus179@korea.kr로 제출
-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추가 공람 기간과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6월 18일 ~ 2025년 7월 16일
 - 공람장소 : 현장 및 온라인
 - 현 장 : 3개소
 - (광양시청, 광양읍사무소, 골약동주민센터)
 -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온 라 인 : 광양시 누리집(https://gwangyang.go.kr,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ass.go.kr)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
-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추가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년 6월 18일 ~ 2025년 7월 23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ass.go.kr)에 의견 등록
-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순환과 ☎061-797-2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